

## 통일한국의 미래: 친여성적인 생태공동체를 향하여

강미화

사회과학부 사회학전공

### <요약>

20세기 문명이 인류에게 남긴 가장 커다란 과제는 인간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 그리고 자연에 대한 수탈로 야기된 지구의 환경위기를 극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더 나은 대안적 문명을 구상하는 일은 통일한국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생태여성주의에 기대어 여성의 시각으로 통일사회를 바라보면서 분단 이래 남북한을 지배했던 성장중심적 개발주의를 비판하고, 그동안 발전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여성과 환경을 자연과 인간의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대안적 개발에 통합시키기 위해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 본다.

## Die Zukunft des vereinigten Koreas: Ein Weg zur frauenfreundlichen Öko-Gemeinschaft

Kang Mi-Hwa

Professorin für Soziologie

### <Zusammenfassung>

Die wichtigen Aufgaben, die der Zivilisationsprozeß des 20. Jahrhunderts uns hinterlassen hat, sind die Abschaffung der Diskriminierung und Ungleichheit in jeder Art sowie die Überwindung der durch eine rücksichtslose Ausbeutung der Natur verursachten Umweltkrise. Diese Aufgaben zu erfüllen und einen besseren alternativen Entwicklungsweg zu suchen, beziehen sich unmittelbar auf die Vorbereitung für die Zukunft nach der Vereinigung von Korea. Es handelt sich daher in dieser Arbeit darum, in Anlehnung an den Ökofeminismus, den bisherigen, ausschließlich wachstumsorientierten Entwicklungsprozeß

der beiden Teile Koreas kritisch zu betrachten und aus Sicht der Frauen neu zu bewerten. Es wird weiterhin versucht, einen frauenfreundlichen und ökologisch verträglichen Weg zu suchen, worin die bis dahin versagte Einschließung von Frauen und Natur in den Prozeß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ermöglicht wird.

## 1. 들어가는 말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과 함께 붕괴된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통일 된지도 10년이 지났다. 아직 분단국가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에게는 지난 50년 간 일어난 세계사적인 사건 중에서 동서독의 통일만큼 의미심장한 일도 드물 것이다. 동서독의 통일이 한반도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반된 두 체제가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동서독의 통일은 한반도에서도 통일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닥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과 함께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는 원초적인 동포애에 기초한 열망만으로 통일을 기원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남한사회에서 논의된 통일방안의 주된 흐름은 남한의 주도 하에 북한을 흡수통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소련과 동독을 비롯한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진 후에 북한 경제위기의 심각성이 외부로 알려지고 정치권력의 안정성에 의문이 커지던 90년대에는 북한 내부로부터의 붕괴로 인한 “떠맡기식 흡수통일”을 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흡수통일론은 북한체제가 예상 밖의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리고 서독이 감당해야만 했던 막대한 통일비용과 일방적인 흡수로 인한 후유증들이 드러나면서 거품이 걷히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재는 독일이 경험했던 ‘선통일, 후통합’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역순으로 이루는 ‘선통합, 후통일’의 방안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sup>1)</sup> ‘선통합, 후통일’의 방안은 우선 남북한이 부문별로 서로 통합가능한 지점들을 찾아내어 점진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상호합의 하에 단계적으로 실천해나가다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대등한 위치에서 통일을 이룸으로써 통일비용과 통일 이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고 해도 반세기가 넘도록 각기 다른 체제 속에서 서로 상이한 의식과 삶의 경험을 키워 온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서로 사이에 놓여진 유형, 무형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의미의 연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짚어 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한국의 미래를 조망해보는 데는 남북한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사회는 아니었지만 지

1) 이는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평화통일방안의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두 정상은 합의한 6·15 남북 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진행시켜 나가기로 하였다(제2항)”와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제4항)”라고 명시되어 있다.

난 10년 간 통일이라는 역사적 실험을 먼저 치뤘던 동서독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통일 후 동서독의 내적 통합(innere Einheit)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들은 남북한 사회가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독일의 통일은 서로 대등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서독과 동독이 상호합의를 거쳐 이룬 것이 아니라, 서독이 동독을 일방적으로 인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sup>2)</sup> 그 결과 서독은 통일 후 독일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이자, 준거틀이 되었다. 따라서 그 후의 통합 과정은 명목상으로는 통일 당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던 동독을 서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즉 동서독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맞추어 졌으나, 내용상으로 보자면 그것은 다름아닌 “동독의 서독화”가 추진되는 과정이었다.

서독을 기준으로 하여 동독을 재건하려는 시도는 산업, 고용, 소득, 주거, 교육, 사회복지, 환경 등 분야별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것이 바로 통일비용이다. 통일비용에 관한 문제는 통일 당시에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건실했던 서독의 공공재정 상태, 동독이 소유하고 있었던 국유재산의 사유화로 인한 매각수입, 유럽연합의 지원금과 투자유치, 분단유지 비용의 소멸, 민간투자 등을 활용하면 곧 해결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김영탁, 1997:134). 그러나 동독지역의 산업기반과 하부구조, 기타 사회적 여건이 예상 밖으로 낙후되어 경제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실업과 생활기반의 파괴로 인한 동독 주민들의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밝혀지자, 통일비용은 동서독 갈등의 새로운 요인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서독이 가장 예측하지 못했던 분야가 환경부문이었다. 신연방으로 편입된 구동독 지역이 하나의 거대한 환경오염체임이 드러나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였던 것이다.<sup>3)</sup> 투자기피요인으로까지 여겨지는 산업오염지역을 정화하고, 수질, 대기, 토양오염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여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갖추는데 대규모의 재정투자와 정치적 노력이 소모되었다. 동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는 막대한 비용부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문제였지만 경제회복을 앞세운 다른 정책분야와 끊임없는 갈등을 빚었으며 서독지역의 환경정책을 계획대로 실천하는데도 지장을 주었다. 환경분야가 통일 전에 동서독 교류와 협력이 가장 부진했던 영역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즉, 통일 후 환경문제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 
- 2) 독일통일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1990년 10월 3일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 편입됨으로써 형식적으로 완성되었다. 독일통일이 내포하고 있는 양면적인 성격은 “법률적으로는 동독이 자신의 국가주권을 발달당한 뒤 서독 헌법의 유효범위 안으로 편입되는 행사였으며, 권력 정치적으로는 서독의 정치세력이 동독의 정치권력을 몰아낸 뒤 그 자리를 차지하는 절차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서독의 대자본이 동독의 인민소유재산 대부분을 집어삼키는 과정이었다. ... (그러나) 동서독 통일은 단 한 건의 유혈사태도 없이, 단 한 사람도 굶겨 죽이지 않으면서 진행되고 있다. 통일은 동독사람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져다주었으며, 물질적으로도 대체로 통일 이전보다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말에서 잘 나타나 있다(박강현, 1999:6-7).
- 3) 통일 당시 동독의 전체 면적 중 40% 정도가 시급히 치유해야 할 환경오염에 사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때까지 동독은 공업용수의 95%이상을 무처리 상태로 하천에 흘려 보내고 있었고, 주민의 31%만이 위생적인 하수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유럽에서 소련 다음으로 아황산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었다. 그 결과 산림의 44% 이상이 산성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태였고, 산업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절반 가량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기존 수로의 3%와 하천용수의 1%만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오염된 수로의 42%와 하천용수의 24%는 비용이 많이 드는 최신 기술을 투입한다고 해도 더 이상 음료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Strübel(1991)과 Hillenbrand(1996)를 참조할 것.

높은 수준에서 환경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공동의 삶의 터전을 온전하게 보존하여 후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것이지만, 보다 실질적으로는 불필요한 통일비용의 발생을 줄이고 사후조치적인 환경정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질적으로 개선된 환경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남북한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래의 통일한국이 지속가능한 생태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기존의 남북한 환경관련 연구들이 기여해 온 바처럼 남북한 환경오염의 실상을 밝히고 그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시각으로 통일을 바라보면서 분단 이후 남북한을 지배했던 성장중심적 개발주의의 결과를 반성하고, 그러한 개발주의가 자기실현의 수단으로 삼았던 여성과 환경에 대한 지배와 억압을 밝히면서, 작게는 한반도내 환경의 회복, 유지, 개선을 위해서, 크게는 그동안 소외되어 온 여성과 환경을 자연과 인간의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대안적 개발에 통합시키기 위하여 남북한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한다.

## 2. 경제성장 중심주의와 환경문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공통점

인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인간이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을 삶의 위기로 파악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세기 초반 해도 자연은 무한한 자원을 생산하며, 무질서와 파괴로부터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고, 영원히 보존된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에 끼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인류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과 에너지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중 많은 것은 재생 불가능하며, 일단 교란된 자연은 질서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무질서로 진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이상문, 1994). 이러한 인식전환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자연생태계와 인간사회의 교호방식이나 거대한 지구생태계의 진화체계에 주목하는 신생태학의 발전이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산업화와 도시화가 자연에 미친 부정적 결과들이 누적되어 환경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인간이 직접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거대기술이 밑받침이 된 중공업 중심의 산업질서가 확산되면서 인류는 산업화 초기에 발생했던 국지적인 환경오염의 단계를 넘어서서 지구 사막화, 열대림 파괴,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과 같은 지구생태계의 거시적 교란을 목격하게 되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착취가 불러오는 파괴적인 결과가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데는 1972년에 발표된 「성장의 한계」라는 제목의 로마클럽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로마클럽 보고서는 인류의 위기를 자원고갈, 에너지원의 유한성, 인구폭발, 환경오염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기존의 성장방식과 성장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인류는 불과 몇 십 년 안에 생태적 환경의 한계로 인해 강제로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이들이 지구위기의 근원으로 지적한 파잉성장과 과도한 공업화의 출발점은 근대경제의 출현이었다. 여기에는 20세기 내내 서로 체제경쟁을 해왔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가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흔히 사회체제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전적으로 다른 것으로 취급되어져 왔고, 특히 맑스주의 쪽에서 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지닌 문제점들을 모두 극복한 형태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마무라 히토시(1999: 39-40)가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말만 다를 뿐, 근대경제라는 점에서는 결국 같은 뿌리이다. ... 두 체제는 공통의 지표를 그리며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경제합리성이며 다른 하나는 기술합리성 내지는 그것을 받쳐주는 생산력중심주의이다. 생산주의적인 발상법은 결코 자본주의 사회 특유의 것이 아니라, 어떤 점에 있어서는 그 이상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이념이기도 했다. 완성된 체제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경제합리성이나 기술합리성 그리고 생산력을 높여야 한다는 발상은 양쪽이 전적으로 동일하다.”<sup>4)</sup> 인류가 봉착한 환경위기를 중심에 놓고 볼 때 이러한 시각은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다. 자연의 무절제한 이용으로 인한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의 확대를 초래한 경제성장중심적 개발주의를 추구해 왔다는 점에 있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의 환경문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근대화라는 이름 하에 추진된 산업화는 한편으로는 인간이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는 진보의 과정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적인 도시건설로 인한 자연파괴에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첨가되고, 이로부터 수질, 대기, 토양오염이 심화되면서 농업기반, 주거지역, 자연환경이 점차로 악화되는 퇴보의 과정이었다. 사적인 이윤추구와 무한경쟁, 확대재생산이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운영원리를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토대를 둔 선진 산업국가들의 성장양식과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양식과 발전의지, 그리고 이 둘을 매개하고 강제하는 자본주의적 세계질서가 지닌 문제점들은 오늘날 환경위기를 파악하는 기본틀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는 60, 70년대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시민들의 환경운동과 환경(운동)전문가들의 꾸준한 문제제기 덕택이다. 특히 서구의 경우 이들에 의해 공론화된 환경문제의 쟁점들은 제도권 정치에까지 흡수되어 환경보존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녹색정치를 지향하는 환경정당의 건설에 토대가 되었다(문순홍, 1994; 정수복, 1996; 최종욱 외, 1994).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과 자국 정부의 무모한 개발행위에 항거해서 일어난 개발도상국에서의 환경운동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자원과 부에 대한 불평등한 분배와 관리가 지구 환경위기의 중요한 요인임을 선진국에 인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들의 활동은 부국과 빈국으로 나뉘어진 지구촌의 환경관련 NGO들이 세계적인 연대망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sup>5)</sup>

이에 비해 사회주의에서의 환경문제는 체제 자체가 지닌 폐쇄성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환경오염은 사적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에서나 발생하는 것이지, 잘 짜여진 계획경제 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대외적인 선전은 사회주의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심각성 여부를 더욱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주변국으

4) 번역자의 문장을 다소 수정하였음.

5) 초기에 북반구의 선진국들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환경위기의 핵심요인으로 남반부 국가들의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인구증가를 지적한 반면에, 남반부 국가들은 선진국의 과소비적인 도시중심적 생활양식과 그들이 주도하는 자원과 부의 집중화 추세, 다른 모든 유형의 지식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특정한 형태의 합리성만을 인정하는 서구 과학의 지배를 문제삼았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던 세계 환경관련 NGO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양자 사이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지구 환경위기의 본질에 대한 인식지평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로 흘러드는 하천과 해안의 오염상태, 대기에 섞여 국경을 넘는 공해물질, 공업발전의 정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주의에서의 환경오염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러한 짐작은 80년대 말 구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한 뒤 체제 내부가 공개되자 사실로 드러났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을 뿐, 실패한 계획경제의 흔적이 환경문제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미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회주의에서의 환경문제도 우선은 생산력을 무제한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념에 기초한 생산력중심주의, 즉 성장제일주의에 기인한다(Strübel, 1991; Raestrup & Weymar, 1982).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자본주의에서와는 달리 세계시장과 단절된 상태에서 자립경제를 달성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자원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무제한의 자연채취, 생산재의 자립적 조달을 위해 중공업에 치중된 산업구조, 중앙에서 독점적으로 관리되는 비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자본도입과 기술이전의 어려움으로 인한 낙후된 생산시설 등이 무모한 개발과 과도한 자원소모,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친환경적 기술이나 하부구조의 미비로 인한 환경오염을 부추겼던 것이다.<sup>6)</sup> 또한 체제가 갖는 정치적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국가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밑으로부터 비판하고 수정할 수 있는 사회운동이 성장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될 수 없었던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 3. 남북한의 환경문제

앞에서 언급한 양 체제가 갖는 기본적인 특징들은 남북한의 환경문제에도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60년대 이래 군사정권에 의해 급격히 추진된 남한의 산업화 과정이 환경과파괴적인 개발주의의 전형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 중에서도 7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중화학 공업화는 고에너지 산업이라는 사실과 함께 대규모 공업단지의 형성에 따른 도시화와 그곳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생태적 환경조건을 단숨에 악화시켰다. 그 결과 70년대 말에 이르자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20년이 채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와 공단지역의 대기, 수질의 오염상태는 환경기준을 훨씬 초과하게 되었다.

대기오염의 경우 80년대 중반까지는 가정용 연료인 연탄이나 공장과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가 주범이었다. 그러나 80년대를 지나면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와 청정연료 사용의 의무화, 저황연료공급의 확대로 아황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정희성, 1995c; 정준금외, 1999:39-43). 하지만 자동차 운행이나 가정용 난방,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로 인한 오염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수준에서의 대기오염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sup>7)</sup> 이에 따라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각종 호흡기 질환은 물론,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공기 중의 물방울에 녹아 내리는 산성비로 인한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sup>8)</sup>

6) 제국주의 정책으로 제3세계의 자원을 착취, 관리, 통제하고, 국제분업을 이용하여 오염산업을 상당 부분 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었던 선진 자본주의국가와는 달리 사회주의국가에서는 “환경비용의 외부화”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함께 지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7) 1996년 말 현재 자동차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전체 대기오염물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5%나 된다. 정준금 외(1999:41)를 참조할 것.

수질오염의 상태는 대기오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래 내륙과 해안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었으나 수질보호를 위한 시설이나 법적, 제도적 기반은 제때에 마련되지 못했다. 80년대 초에 이르러 수질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이 뒤늦게 제정되었지만, 이미 4대 하천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주요 수계는 심각한 오염상태에 놓인 뒤였다. 90년대에 들어와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지천의 수질이 다소 개선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본류의 오염도는 일시적인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는 형편이며, 4대 하천 중에서 금강을 제외한 나머지 하천은 매년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환경부, 1999; 김타균, 2000).

산업폐기물의 경우 산업화의 정도가 심화되고 산업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유해물질의 양과 종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분해처리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생체 내에 축적되어 만성적인 피해를 입히는 등, 그 독성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증대로 생활쓰레기를 비롯한 일반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존의 산업오염에 소비오염까지 추가되었다. 일반폐기물에 속하는 생활쓰레기의 경우 자원절약 차원의 감량이나 분리수거에 의한 재활용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아서 매립지와 소각시설의 부족은 물론 수질,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sup>9)</sup>

경제개발과 산업화가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듯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은 시장경제에서 개별 기업의 경제활동이 야기하는 환경피해를 방지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미약했기 때문이다. 60년대이래 정부에 의해 사회발전의 중심 화두로 내세워진 경제성장 제일주의 하에서는 환경문제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이나 도입, 각종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 등을 통한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도 허용되지 않았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은 7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고, 이어 1980년에는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0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이, 3년 뒤인 1993년에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고 쓰레기종량제 실시나 재활용 방안이 강화되는 등 환경정책의 수단이 다소 다양해졌다(정희성, 1995c:219). 또한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행정부서로 1980년에 환경청이 신설된 뒤, 1990년에는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고, 1994년에는 다시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 개편되었다. 그러나 예산규모나 정치적 영향력을 볼 때 환경부의 위상이 다른 부서에 비해 여전히 미약하고 관련부서와의 연계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에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정책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sup>10)</sup>

정부 차원의 느린 대응에 비해 시민들의 문제제기는 보다 빨리 이루어졌다. 정부가 수립한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산업화가 시작되었던 60년대에 이미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공단 주변의 피해지역 농어민을 중심으로 주민운동이 생겨났다. 이러한 주민운동은 때로는 매우 격렬하게 전개되기도 했지만 조직적인 운동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한 데다가,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가 우선시되었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8) 5월에서 7월 사이에 가장 심하게 내리는 산성비는 pH 5.6 이하일 경우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라고 평가되는데, 1998년 현재 서울은 4.9, 부산은 4.7, 대구는 5.4로 나타난다. 이에 관해서는 김타균(2000)을 참조할 것.

9) 1998년 현재 남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8.9%가 소각처리되고, 56.2%가 매립되며, 단지 34.9%만이 재활용되고 있다(김타균, 2000).

10) 환경부의 예산규모는 1980년대 중반이래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현재 GNP의 0.27%, 정부예산의 1.01%에 불과하다(환경부, 1999:510).

부각시키는 사회운동으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 외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환경관련 전문인들에 의해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그들의 시도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거나 시민들과 연결되어 집합적이고 조직적인 환경운동으로까지 진전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는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고, 문제 제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환경오염을 들어 국가의 경제성장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체제도전으로 받아들여 금기시했던 당시의 억압적인 정치체제 때문이기도 하다(이득연, 1998:61-67).

산발적, 고립적, 간헐적으로 발생하였던 환경운동이 보다 전문성과 조직적인 기반을 갖춘 시민운동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70년대 말 이후였다. 이 시기에는 주로 공해추방을 쟁점으로 활동하는 소규모 운동단체들이 환경의식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환경오염 실태를 밝히거나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sup>11)</sup> 80년대에 이르면 전문운동가와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환경운동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여러 형태의 환경운동 사이에 연대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환경운동을 이끄는 이념적 지향도 환경문제를 단지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환경관리주의적인 입장에서부터 현재의 산업문명 자체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근본생태주의적인 입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 80년대 말을 지나면서부터는 일상을 지배하는 생활양식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생겨나면서 여성들의 환경운동에의 참여가 두드러진다.<sup>12)</sup> 이는 공공영역에 지향된 운동을 사적 일상으로, 학습된 환경의식을 구체적 실천으로 하강시키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90년대에는 환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기존의 환경단체들이 통합, 발전을 거듭해서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 「환경정의 시민연대」와 같은 전국 규모의 전문환경운동조직이 탄생하게 되었다.<sup>13)</sup> 이로써 전문환경운동과 주민환경운동, 소비자운동이 결합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환경운동의 전문성과 운동성, 지속성과 항상성,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원칙적으로 시민운동이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인 감시(monitoring)를 행하고, 국가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주창(advocacy)하며, 국가에 모자란 부분을 혁신(innovation)하고, 나아가 국가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을 제공(provision)할 수 있다”고 할 때(조효제, 2000:49), 남한의 환경운동은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과 산업화의 과정에서 국가와 시장이 외면했던 환경보전의 역할을 담당해 온 유일한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에서의 환경문제는 어떠할까? 북한의 환경문제에 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11) 초기의 환경운동은 단체의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공해문제에서 출발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기의 단체로는 1970년 말에 만들어진 「공해연구회」, 1982년의 「한국공해문제연구소」, 1984년의 「반공해운동협의회」, 1986년의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1987년의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구 반공해운동협의회)」, 1988년의 「공해추방운동연합(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와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의 통합), 등이 있다. 특히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는 여성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공해문제에 대한 인식을 대중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이득연(1998:62-65)을 참조할 것.

12)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살림 모임」이나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시작한 생활협동조합운동을 들 수 있다. 특히 여성민우회의 생활은 환경운동과 여성(주부)운동, 협동조합운동을 연계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선구적이다.

13)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1988년부터 활동해 온 「공해추방운동연합」과 그와 연대관계에 있던 지역단체들이 연합하여 1993년에 창립되었으며, 2000년에 들어와 「환경연합」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녹색연합」은 1991년 설립된 「배달환경연구소」로부터 출발하여 1993년에는 「배달환경연합」이라는 전국조직이 탄생하였고, 1994년에 「대한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와 「푸른한반도되찾기시민의모임」과 통합하여 「배달녹색연합」으로 재창립하였으며, 1996년 「녹색연합」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환경정의 시민연대」는 1992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개발센터」로 창립하여 1998년에 사단법인 「경실련 환경정의 시민연대」로 개칭하고 1999년에 경실련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북한에서 나오는 각종 경제, 산업관련 자료나 북한 이탈주민 또는 북한지역 방문자를 통해서 알려진 얼마 안되는 환경관련 사실들은 통일부에서 펴내는 자료집이나 북한의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남한 학자들의 글에 계속 중복되어 나타난다. 이는 정보공개에 매우 인색한 폐쇄적인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연구가 지니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하겠다.

북한은 지금까지 북한식 사회주의를 주체사상을 창조적으로 구현한 ‘공해없는 나라’, ‘공원 속의 도시’, ‘인민의 지상락원’이라고 선전하면서(통일부, 2000:483),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정확한 환경보호정책을 내놓고 전체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 왔다”라고 주장해왔다(윤기관, 1994:11). 이러한 북한의 선전이 과장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최근까지 남한에서는 북한은 인구밀도가 낮고, 도시화로 인한 문제도 적으며, 산업발전과 소비수준이 뒤떨어져 있고, 관광개발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환경오염의 정도가 덜할 것이라는 추측을 해왔다. 그러나 접근가능한 각종 자료를 이용한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북한의 환경오염이 드러나는 양상만 다를 뿐 남한과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밝히고 있다.<sup>14)</sup>

조선로동당 간부로 있다가 1988년 귀순한 김정민(1995)은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최종 목표인 자력갱생은 곧 자립적인 경제와 국방을 이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화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기반을 둔 지도이념과 구체적인 건설방침들이 오늘날 극심한 환경파괴와 오염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자력갱생을 위해 생산력을 최대한 발전시키겠다는 사회주의의 목표가 자연을 대책없이 무한정 개조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것이다. 남한의 북한 환경관련 연구자들 또한 북한이 국가적으로 추진하였던 주요 정책 중 거의 모두가 환경오염과 파괴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15)</sup>

북한의 환경오염의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다섯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첫째는 중공업에 집중된 산업구조이다. 북한은 50년대 초반부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킨다는 목표 아래 중공업,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공해집약산업으로 꼽히는 제련, 제철, 금속, 화학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sup>16)</sup> 그리고 이러한 중공업 발전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워진 것이 각종 철광석, 비철금속, 석탄 등을 캐는 채취공업이었다. 산업구조가 군수공업의 기반이 되는 중공업과 채취공업 중심으로 편성되고, 채굴과 생산과정이 부족한 자본과 후진적 기술에 의존된 채 진행되면서 유해폐기물과 공해가 다량으로 유출되었다. 이를 정화시킬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중공업화의 반대급부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공해병이었다.<sup>17)</sup>

14) 북한의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는 80년대까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가 90년대 초, 중반에 갑자기 활성화되었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환경협력과 교류가 증대되었고, 북한 또한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이를 계기로 남한 환경부가 북한지역 환경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사회주의 하에서의 환경오염실태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북한 환경문제에 관한 가장 체계적인 연구로는 정희성(1995a, 1995b, 1995c), 손기웅(1996)을, 북한 환경관련 참고자료를 위해서는 정희성, 강철구(1999: 264-286), 통일부(2000)를 참조할 것.

15) 이에 관해서는 주 14 참고문헌을 볼 것.

16)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했던 50-60년대에 북한은 총투자액의 약 54%를 공업부분에 투자하였으며, 그 중 중공업부분에 대한 투자는 81%에 이르렀다(박종권, 1998:13).

17) 북한이탈주민의 말에 따르면 화학, 제련산업이 밀집해 있는 청진, 원산 등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액체화학연료를 생산하는 자강도의 별오동에서는 전체 주민의 40% 가량이 간염, 간경변증, 간암, 간경화를 앓고 있으며, 운하공장에서는 여성근로자들이 불임증이나 유산, 기형아 출산 등의 환경오염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통일부, 2000: 483-84).

둘째는 지력을 무시한 농업정책을 들 수 있다. 식량자립을 위해 추진된 북한의 식량증산 정책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도한 사용을 부추겼다. 그 결과 북한 농경지의 90% 이상이 이미 오래 전에 산성화되었으며, 빗물에 섞여든 농약과 비료는 농경지만이 아니라 북한 전역을 오염시켰다(김정민, 1995:80). 또한 경지면적을 확장하기 위해 1970년대 중반부터 실시된 다락밭 건설과 80년대에 시작된 새땅찾기 사업, 산림자원 채취를 위한 벌목사업은 산림의 황폐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 외에 농경지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간척사업도 해양생태계 파괴와 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힌다.

셋째는 에너지 공급구조의 취약성이다. 북한은 산업 에너지의 대부분을 질 낮은 석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엄청난 양의 황산화물과 질산화물이 배출되었다. 공해방지 시설이 부족하여 그대로 방출된 유해물질은 산성비를 불러와 산림과 동식물 생태계를 손상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오염을 일으켰다. 더욱이 북한의 경제구조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위주로 짜여져 있는 반면, 에너지 효율성은 매우 낮아서 선진국의 1/10, 남한의 1/4 수준에 불과하다(박종권, 1998:10). 또한 가격통제정책을 이용하여 기초생산재인 에너지자원을 싼 값에 제공하는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 스스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자원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도 환경오염을 가중시킨 원인이었다(김상중, 1994:131; 손기웅, 1996:11).

넷째는 1960년대 이후 추진된 4대 군사노선에 따른 군사화정책을 들 수 있다. '전국토의 요새화'가 불러온 자연파괴와 함께 '전인민의 무장화'와 '전군의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금속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군수물자를 대량생산하게 된 것은 또 다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었다(손기웅, 1996:16; 정희성, 1995a:49). 군사시설지역과 군주둔지는 북한에서 대표적인 악성 오염지대로 꼽힌다.

다섯째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이다. 북한의 환경오염이 점차로 심화되고 있고, 조만간 개선될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는 비관적인 전망은 북한이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해 낙후된 산업시설들을 현대화할 여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기초해 있다. 현재 북한 산업시설의 70% 정도가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후화된 시설들이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일부 공장들마저 전력난 및 자원부족으로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김강령, 1995:160). 낙후된 산업시설은 자연적인 정화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 방출로 인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에너지 낭비와 필요 이상의 자원소모를 불러와 이중으로 환경에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활고 때문에 연료와 식량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행하는 산림남벌과 자연채취를 막을 수 없어 환경손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는 북한의 환경오염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평양을 제외하고는 인구 백만을 넘는 대도시가 없고, 아직 자동차가 보편화되지 않은 북한에서의 대기오염은 주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과 공장에서 연소되는 화학물질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기인한다. 따라서 대기오염 현상은 제철, 제련, 화학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동해안과 서해안 공업지구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며, 구체적으로는 홍남, 함흥, 청진, 신의주, 해주, 남포, 김책, 송림, 평양, 신안주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제련, 화학, 비료, 제약공장이 집중적으로 세워져 있는 홍남과 함흥지역은 대기오염 최악의 지역으로 꼽힌다.<sup>1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공해방지시설이 부족하고, 기존의 시설마저 제대로 관리,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다, 산림의 황폐화로 인해 자연적 정

화능력마저 떨어져 있어서. 이른 시일내에 대기오염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대기오염과는 달리 수질오염은 북한 전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수질오염의 가장 큰 오염원은 광산과 공장에서 무단방류되는 폐수와 노화된 하수시설로 인한 생활폐수; 농축산 하수, 군사시설과 군 주둔지역에서 나오는 폐수들이다. 특히 제철과 제련산업에서 유출되는 폐수와 폐기물은 양적으로도 방대하지만 독성이 강해서 인체에 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동식물과 수자원까지 멸종시키고 있다. 평양의 경우에는 이미 60년대 말부터 상수원인 대동강의 수질악화로 식수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북한에서도 일부 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연수를 식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김정민, 1995:80-81). 원래 물이 맑은 것으로 유명했던 두만강도 상류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심하게 오염되어 식수는 물론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5급수 이하의 상태에 놓여있으며 압록강도 이미 3급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정희성, 1995c:216). 이러한 수질오염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와 함께 토양오염을 가속화시킨다. 농약과 화학비료의 남용, 분노의 무분별한 투하로 인한 토양오염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지만, 보다 염려스러운 일은 광산과 공장에서 방출되는 독성물질이 북한의 토양을 점차 중금속으로 물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식량과 생필품을 비롯한 물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서는 소비차원에서의 환경오염은 매우 적어 보인다. 대도시의 경우에도 음식물과 포장재, 의복, 가구를 비롯한 각종 내구성, 비내구성 소비재로 인한 생활쓰레기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북한에서 온 정유진(1992)은 세계에서 재활용이 가장 잘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일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에서는 재활용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각이나 매립을 위해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별로 없다.<sup>19)</sup> 이는 북한의 산업이 철저하게 재활용을 하지 않고는 일년에 서너 달도 가동되기 힘들다는데 이유가 있지만, 자력갱생의 원칙을 지향하는 북한정부가 자원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처벌이 동반된 강제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폐품 재활용에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양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생활쓰레기보다는 하수처리시설이 노후화된 탓으로 주민들의 생활하수가 인근 하천에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로 나타난다.

무리한 공업화와 과도한 국토개발로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면서 70년대부터 북한은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과 공해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sup>20)</sup> 하지만 북한이 정책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환경문제를 거론하면서 법제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 회의에서 「환경보호법」을 채택하면서부터이다.<sup>21)</sup> 이

18) 김정민(1995:82)에 따르면 홍남지구의 거리에서 하루 정도를 보내면 코에서 시커먼 매연이 나오고, 머칠이 지나면 호흡기 계통에 이상이 생긴다고 한다. 또한 홍남시와 함흥시의 경우에는 육안으로도 쉽게 뿌연 대기오염 상태를 항상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19)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은 시가지가 매우 깨끗하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평양시 도시경영사업소는 자동차 전용도로 청소원 약 200여명, 도로 청소차 약 20대, 가로수 관리원 약 50여명, 2.5톤 쓰레기 수거차 약 100대, 수거인원 약 200명 정도를 가지고 평양시의 쓰레기 처리와 도시 미화사업을 거뜬히 할 수 있다고 한다(정유진, 1992:114).

20) 60년대에는 김일성 주석이 환경파괴를 문제삼아 묘향산 금개발을 반대한 사례가 있고, 70년대 “3대혁명소조” 시기에는 공해방지와 환경보호가 주요 임무 중의 하나로 강조되었다. 또한 1980년 4월 4일 로동신문에 보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제21조에는 “국가는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공해현상을 막는다. 공장, 기업소와 해당기관들은 가로수와 녹지를 많이 조성하며 여러 가지 유해가스와 유해물질에 의하여 대기, 강하천, 토지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1)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모두 5장 52조로 짜여져 있다. 제1장은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을, 제2장은 자연환

에 따라 북한 전역에 자연환경보호구 및 특별보호구가 지정되고, 10여개의 환경오염 관측소 및 기상수문 관측소가 신설되었으며, 평양의 평천오수정화장을 비롯한 10여개의 정화장·침전지가 건설되었고,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남흥청년연합기업소, 상원시멘트 산업시설에 공해방지시설이 설치되었다(김강령, 1995:170; 통일부, 2000:479-480).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1995년 12월 모두 5장 55조로 구성된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채택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일반원칙, 환경보호 지도와 관리,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1992년부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정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는 새로운 환경보호조항이 헌법에 첨가되었다. 그리고 1993년에는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환경보호위원회」를 정무원 산하 비상설기구로 설치하였으며, 이는 3년 뒤인 1996년에 「국토환경보호부」라는 명칭의 정식 정무원 기구로 개편되었다. 그 후 1998년 헌법개정에 따라 「국토환경보호부」와 「도시경영부」가 통합되어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일 년만인 1999년에 「도시경영성」과 「국토환경보호성」으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통일부, 2000:480). 이러한 변화를 볼 때 최근에 들어와서는 북한정부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는 국제적 흐름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sup>22)</sup>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도적 기반의 확대가 팔목할만한 진전인 것이 분명하지만 외면적으로 벌려놓은 것만큼 실제적으로 북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환경보호를 위한 행정체계가 아직은 산만하고 법의 내용도 추상적인지라 구호성에 그칠 염려가 크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미루어 볼 때 환경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수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북한주민들의 환경의식이 아직은 매우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고<sup>23)</sup>, 당장은 환경개선보다는 경제적 결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환경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설혹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도 권위적인 정치체제의 성격상 집단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북한정부의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은 선언적인 의미가 더 큰 북한정부의 환경에 대한 관심사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끌어내고, 그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고 하겠다.

경의 보존과 조성에 관해서, 제3장은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제4장은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지침을, 제5장은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환경보호법 전문은 통일부 자료실([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에 게재되어 있다.

22) 80년대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북한의 늘어난 관심은 대외적인 활동이 증가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북한은 1982년부터 유엔환경계획(UNEP) 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1990년에는 평양에서 유엔환경계획과 유엔개발계획(UNDP) 대표 및 환경보호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산업오염의 감시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993년에는 평양에서 최초로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유치하였다(통일부, 2000:480).

23) 주 31을 참조할 것.

#### 4. 남북한 환경통합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의 만남

자본과 기술이 동원된 산업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원시적 오염을 상당 부분 제거한 선진국에서의 환경문제는 과도한 물질적 복지와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는데서 비롯된다는 이유로 흔히 “소비오염” 또는 “사치성 오염”이라고 불린다. 반면 저성장 경제구조와 낙후된 산업기반으로 인해 야기되는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는 “산업오염” 또는 “생계형 오염”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남한의 경우에 혹자는 후진국형 산업오염에서 선진국형 소비오염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산업오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오염마저 가중되고 있는 “중첩형 내지는 혼합형 오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북한의 환경오염은 물론 후자의 양상에 가깝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남한이 반환경적인 개발지상주의의 원형을 버리지 못하고 지난 40년 간 행해 온 오류를 되풀이 하는 가운데, 북한 또한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환경개선의 과제를 방치해 둔 채 자연과파괴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한반도는 통일이 된다해도 생태계 붕괴와 함께 환경조건이 하향평준화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남한과 북한이 우선 한반도 생태공동체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동의하고 공존이 전제가 된 환경협력을 해나가면서, 체제 내적으로는 각각의 사회를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재구조화하고, 상호 간에는 그것이 지닌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서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생태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양쪽의 개발모델 모두가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각자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환경파괴를 야기한 구조적인 준거틀을 점검해보고 새로운 방향전환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오늘날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는 분단 이래 수 십 년 간 지속된 초남성적 개발주의(hypermale development) 또는 가부장제적 악개발(patriarchal maldevelopment)의 결과이다.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자연을 정복하는 과정을 진보라고 믿는 근대주의, 폭력을 곧 힘이라 정의하는 군사패권주의, 물질적 풍요에 치중된 산업주의, 양적인 확장에 집착하는 성장주의, 가부장적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지상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사회에서는 사회경제적 발전의 토대가 된 세계관이 과도하게 남성중심적이어서 여성 또는 여성으로 이미지화된 특정 부류(예를 들면 자연)는 발전의 주체적 행위자가 아니라, 그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한다(김현미, 1998; 김양희, 김희선, 1993:20-21). 여기서 핵심적인 기제로 작동하는 남성중심주의(androcentrism)와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는 대상화된 여성과 자연을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구 또한 개발과정에서 제외시킨다. 그 결과 성장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구적으로 동원된 여성과 자연은 피지배자의 위치에 놓임으로써 일방적인 착취대상이 되거나 개발의 피해자로 남게 되며, 혹 성장의 혜택을 나누어 받는다 해도 남성에 비해 부차적인 수혜자로 머무르게 된다.

유교적 가부장제를 자본주의와 결합시켜 ‘조국 근대화’를 이뤄낸 남한이나, 그것을 주체사상과 결합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이뤄낸 북한이나 다 같이 강화된 남성다움을 기본원리로 하는 병영적 산업주의와 군사주의를 기반으로 삼아 발전해 왔으며, 그러한 과정이 여성

과 자연에 대해 억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남한의 경우 근대화와 경제발전은 한편으로는 고용과 교육기회의 증대로 인해 여성들에게까지 경제적 자립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또 일련의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여성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감을 느끼게 해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고, 정치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으며, 가정과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남성과 성적으로 분리되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더구나 근대화 과정에서 가정경제를 담당하는 주부로서 '가족단위의 신분상승'이란 과제에 묶여 버린 여성들은 도구적 모성의 완전한 발휘와 산업사회에 맞추어 재구성된 새로운 여성성을 갖춘 현모양처의 역할을 강요당하기도 한다(조한혜정, 1998:170-73).

한편 북한에서는 여성해방의 개념이 이미 내재화되어 있는 사회주의 건설이념에 따라 국가가 직접적으로 가정의 혁명에 나서면서 가사노동과 육아의 사회화가 상당히 진전되었고, 여성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면서 성별분업의 경계도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주의 자체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입각한 가족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짐작되듯이 성별 직업분리, 성별 임금격차, 성차별 의식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가족내에서도 가부장제적 성격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이은숙, 1988; 손봉숙 1995; 김귀옥 외, 1997).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평생노동권은 여성들이 가정이라는 물리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전통적인 역할까지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적 노동을 담당했었던 사실과는 별개로, 정치, 행정, 경제, 교육부문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으며, 이러한 성별격차는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남한의 여성들이 저임금 노동자 내지는 산업예비군으로, 또 재생산노동을 담당하는 무임금 노동력으로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여성들 또한 여성을 생산노동에 참여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던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 노동의 담당자가 되기는 했지만, 이는 여성들의 잠재력 개발과 주체형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기보다는 지극히 도구적인 동원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sup>24)</sup> 말하자면 여성들은 노동력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중요한 자원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발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에는 남성중심적 의사결정체제가 자연과 여성의 요구를 개발과정에서 제외시키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었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자연을 지배하고 여성을 주변적인 존재로 취급해 온 "초남성적 개발주의" 또는 "가부장제적 약개발"에 대한 여성들의 대항담론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 다시 말해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한국의 미래를 구상한다고 할 때, 환경위기의 극복이라는 사회적 목표와 양성평등이라

24) 물론 이러한 공통점이 남북한 여성들의 실질적인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성복지와 관련하여 남한보다 좀 더 나은 법적, 제도적 지원체제를 가지고 있는 북한여성들은 사회적 노동에 참여할 권리를 확보한 것에서 남녀평등을 확인한 반면, 사적인 영역에서의 가부장적 논리에 대한 비판적인 논쟁이나 투쟁은 없는 편이었다. 이상적인 헌법을 국가로부터 선사받고, 이미 위로부터 해방이 '선포된' 사회주의에서 살아온 북한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남녀평등에 대한 실천적 자의의식을 자발적으로 형성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이에 비해 남한여성들은 궁극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그들의 해방을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냈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을 구속하는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나 남녀차별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여성운동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는 여성들의 성적 이해관심을 동시에 진전시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어느 상황에서건 특정 지배체제가 이미 질서를 세워놓은 중심부에서 새로운 관계를 창조해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은 주변적 지위에 있는 여성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변혁을 이뤄내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다 함께 해야 할 과제이지만 대안을 구성하는 원리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은 여성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비인간화된 인간사회와 교란당한 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의 논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생태여성주의는 우선 여성과 자연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sup>25)</sup>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의 신체는 자연과 같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여성은 모성의 경험을 통해 타인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존재방식, 이성보다는 직관과 감정에 기초한 교류방식, 이타적이고 관계지향적인 행동양식을 발전시키는 반면, 남성문화체계에서 우월성을 나타내 주는 지배, 통제, 경쟁, 정복의 속성은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 진행되면서 자연과 여성은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이며,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주체, 즉 진보를 향한 남성들의 추진력에 의해 동시에 타자로서 객체화되고, 종속되고, 억압당하는 수난을 겪게 된다.<sup>26)</sup> 자연을 삶의 모태로 보지 못하고 정복의 대상으로 보며, 여성을 더불어 살아가야 할 대등한 존재로 보지 못하고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남성중심적 문화는 보살핌보다는 파괴를 우선시하는 가부장제적 악개발을 낳았으며, 보다 약한 상대를 대상화하며 억압, 착취하는 과정에서 환경파괴가 가속화되었고 동시에 성적 불평등도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해온 위계적이고 닫힌 질서 속에서 인간이 자연을 누르고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문명의 폭력성이 아무런 제동장치없이 반복되어 왔으며, 이 과정 속에서 자연과 여성은 남성지배체제의 동일한 억압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근대 산업주의에 이르러 극점에 도달했었다.

자연과의 강력한 연계성을 나타내주는 여성들의 속성이 태생적으로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생태여성주의자들 내부에서도 서로 대립되는 이견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출산과 관련된 생명관리는 여성의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으나 다른 속성들은 특정한 형태의 성별분업이 진행되면서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강화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태여성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모성과 여성성은 가부장적 질서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사회적 위치는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이며, 가정에서의 삶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연과 생명현상, 느낌과 감정, 타인의 보육과 보호 등에 더욱 밀착되도록 강요했고, 여성의 정체성 또한 그러한 방향에서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모성과 여성성이 여성의 이차적 본성이라고까지 불리워질 정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

25) 생태주의(ecology)와 여성주의(feminism)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의 내부에는 자연과 여성간의 연관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성억압과 자연파괴를 어떻게 동시에 해결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무수히 많은 이론적 갈래들이 있다. 따라서 유사한 조류끼리 묶여져 심리생물적, 사회구성적, 본질주의적, 유희론적, 급진적, 사회주의적, 제3세계적, 자유주의적, 맑스주의적 사회적, 문화적 에코페미니즘 등으로 서로 달리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대개의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배가 상호 연관성을 지닌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하며, 위계적인 가부장적 체제에 반대하고, 여성들에게 친밀한 관계성과 공생의 논리를 토대삼아 환경위기와 성적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 있어서 서로 일치한다.

26) 여기서 타자로서 객체화되었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내재된 존재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자신의 목적을 결여한 채 타자에 대한 유용성을 중심으로 도구처럼 다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는 까닭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모성과 여성성을 타고난 것으로 간주하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길러진 것으로 간주하든, 생태여성주의자들은 그것을 사회변혁에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 속성에 힘입어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며, 더구나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초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생태여성주의에서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평등하게 재정립하고, 죽음의 문화를 삶의 문화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과 함께 대안사회에 대한 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과 삶을 창조하고 보존하는 여성적, 모성적 원리이다. 동시에 그것은 여성보다는 남성을, 육체보다는 정신을, 감성보다는 이성을, 자연보다는 문화를, 객체보다는 주체를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위계화된 이원론적 질서와 가부장적 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기초해서 이들이 그리고 있는 사회는 생태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생태공동체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탈중심적(분권화), 비위계적(수평적 평등관계), 친자연적(지속가능성) 특징을 지니며, 성평등(가부장제로부터의 해방)과 비폭력(평화주의),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참여정치)의 원칙이 관철되는 사회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주의자들이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해 놓은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과도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여성주의 기획과 생태주의 기획을 조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 외에도 생태여성주의는 여러 가지 점에서 여성운동과 환경운동간의 접점을 제공해 준다. 우선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유기적 공존원리와 평등주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배를 다 같이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대개의 환경이념은 불평등과 착취에 반대하고 수평적, 민주적, 유기적 관계와 공동체적 연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환경운동이 지향하는 바는 원래 남성중심성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가부장제적 지배성향에 이의를 제기하는 여성주의의 이념과 일치하며, 여성운동이 겨냥하고 있는 일차적 목표이기도 하다. 반면 여성운동이 지향하는 성평등이란 가치도 남녀차별적인 구조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주류에서 배제된 모든 주변자의 입장과 그와 관련된 여타의 위계구조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없이 는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 여성운동의 목표는 기존의 권력구조를 그대로 둔 채 여성을 새로운 지배자로 앉히려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지배자로 만들고 여성을 종속적인 위치에 가두는 지배체제 자체를 소멸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이 차지했던 자리에 여성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리의 새주인이 된 여성들이 기존의 구조를 여성들에게는 물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 또는 모든 만물들에게 차별적이지 않은 것으로 재정의 할 수 있어야 한다(Braidotti et al., 1994:29-58). 이런 점에서 여성운동은 보편적인 평등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환경운동과 강한 친화성을 지닌다.

더 나아가서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은 모두 다 제도정치의 한계를 넘어서는 생활정치를 필요로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사적인 고충처럼 여겨지는 문제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려 쟁점화하는 것, 바꿔 말해 지금까지 비정치적 영역으로 남아있던 생활영역의 정치화를 통해 일상정치를 살려내는 일은 이들 운동이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환경문제와 여성문제의 해결은 법적, 제도적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운동의 최종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적 지향에 따른 개개인의 의식전환과 일상에서의 실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환경운



동과 여성운동은 보다 더 긴밀한 내적 연대(친여성적 환경운동, 친환경적 여성운동)를 맺을 수 있고, 또 맺을 필요가 있다. 서로의 영역으로의 확장과 침투는 개별 운동이 지닌 힘을 강화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두 운동의 목표를 융합시켜 여성들이 독자적으로 꾸리는 여성환경운동의 활성화는 내용면에서 질적으로 상승되고 실천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며 여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새로운 사회를 향해 기존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의식적이고도 정치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단적인 정치적 행동이 가능해지려면 다양한 여성들 사이의 연대를 위한 공통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걸음은 여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과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로서 새로이 정의하는 것이다.<sup>27)</sup> 이는 사회의 불평등한 성적 관계를 변화시키고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도권을 여성들 스스로에게 부여함으로써 지금까지 감추어진 여성의 능력을 적극 활용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을 능동적 행위자로서 사회발전과정에 통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성을 환경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존재이자 환경관리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서 설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김양희, 김희선, 1993:34-47; 이진아, 1995:80-82). 첫째로 여성은 전통적으로 생명이나 건강을 관리하는 일을 주로 맡아왔다. 특히 여성은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통해 생명현상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어린 생명에 대한 양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특별한 감응능력과 보육능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여성의 신체는 임신과 육아에 대비하여 수용적이고 축적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환경오염에 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 결과 환경피해에 보다 민감하다. 셋째로 여성은 가족을 돌보고 보호하는 생활공간의 실질적인 관리자이기 때문에 일상의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나 불편을 더 많이 감지하게 되므로 환경관리에 더 적극적일 수 있다. 넷째로 양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여성들은 관계지향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생의 논리가 요구되는 유기적 협동관계에 능숙하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성적 역할과 여성 특유의 경험을 자연에게로 확대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아닌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지탱해주고 있는 생명지지체계와 인간들 사이의 균형,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위에서 언급된 여성의 친환경적 잠재력이 사회의 성별위 계구조에서 종속적 지위를 차지하는 여성에게 강요된 '약자의 윤리'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sup>28)</sup> 그러므로 만일 환경보존이라는 과제가 성적 불평등의 지양이라는 과제와 연계되어 추진되지 않는다면, 성장이라는 경제적 목표에 여성이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27) 여성을 환경위기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위기극복을 위한 (능동적인) 환경관리자로서 강조하게 된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의 일로, 여기에는 유엔 산하의 환경관련 기구나 비정부개발기구 또는 비정부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Women,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WED)"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Braidotti(1994)를 참조할 것.

28) '여성성'을 부정하는 것을 해방의 전략으로 삼고 있는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폐로 보상되지 않는 일을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성노동의 '공짜 투입'을 증가시키고, 이는 기존의 성별 경제적 불평등과 여성의 빈곤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박영숙(1997)은 이를 오히려 기득권자들의 기성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로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여성들이 또 다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실에서 그 힘이 새로운 변화의 추진력이 되려면 여성들이 기존 사회의 권력관계 속에서 열등한 것으로 정의된 여성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오히려 저항의 무기로 사용하며,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환경친화적인 자질과 예측적인 사회적 지위 그 자체가 사회변혁에 대한 보다 더 나은 전망과 실천을 가져다 주는 열쇠는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종속적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재생산노동에서 얻어진 지식과 경험을 자원삼아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그것을 넘어서서 사회변혁의 촉매자이자 주도자가 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여성들의 가장 개인적인 경험을 집합적인 전략으로 전환시키고, 그들의 이해관심을 정치적으로 구조화하고 행동으로 실행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류가 전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이자, 한 사회의 정치, 경제구조와 복합적으로 엮여있는 환경문제의 성격을 볼 때 여성을 환경위기 해결의 주체로 세우는 것은 여성이 사회발전에 적극 개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세력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자신들 나름의 성적 이해관심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서 당대의 주요한 사회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대안사회의 모색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여성들이 바라는 통일사회를 이루기 위해 남북한의 여성들이 도달해야 할 최소한의 공동목표가 되어야 한다.

## 5. 생태적으로 건전한 통일사회를 위한 여성의 역할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심각함을 볼 때 남북한 환경협력의 필요성과 시급함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시된 녹색연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이나 이산가족 문제와 더불어 남북환경협력과 같은 환경의제가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일반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84%, 환경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86%를 차지했다.<sup>29)</sup>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이나 높은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환경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객관적인 토양은 대단히 척박하다. 우선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해도 환경개선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다. 그리고 남한의 경우, 환경운동이 시민운동의 주요 부문으로 자리잡기는 하였지만 아직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비교적 높다고는 하나 그것이 실천적 행위로까지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인 기업들은 엄격한 환경기준이 순수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해묵은 경제논리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는 국가정책에서 환경사안이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미약했기 때문에 남한의 환경정책은 단편적, 단기적, 사후적, 기술의존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해 왔다. 한편 북한에서는 환경오염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환경의식도

29) 녹색연합이 2000년 5월 15일에서 24일까지 일반 네티즌(1563명 접속)과 환경전문가 집단(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녹색연합의 정책제언자료실([www.greenkorea.org](http://www.greenkorea.org))에 게재되어 있음.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사회적 담론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탈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sup>30)</sup> 북한주민들에게 ‘환경보호’는 주로 산림녹화나 도로정비, 하수구청소 등의 ‘환경미화사업’ 정도로 이해되고 있으며, ‘환경파괴’ 또는 ‘환경오염’이라는 말에 대한 친숙도는 “환경보호”라는 말보다 훨씬 낮게 나타난다. 더불어 응답자의 60% 가까이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의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1986년에 제정된 환경보호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46.5%로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했다.<sup>31)</sup>

이러한 남북한의 상황은 한반도 생태공동체를 위한 노력에는 일종의 ‘선도자’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남북한 어느 한쪽에서라도 높은 환경의식과 기초가 다져진 환경정책,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다면 환경통합의 틀을 마련해가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특히 여기서는 산업화와 환경오염의 진행이 빠른 만큼, 환경의식이나 환경운동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남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경제보다 환경을 우선시하기 힘든 각자의 현실을 감안할 때 생태공동체로 당장의 방향전환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남북한 환경통합을 위한 최소 목표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sup>32)</sup> 한반도 생태공동체 건설은 아주 장기적인 역사적 과제이므로 초기에는 온건 녹색정치(경제성장과 환경의 조화)에서 시작하여, 점차 실시가능한 분야부터 부분적으로 급진 녹색정치(환경이 경제성장에 우선)를 도입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급진 녹색정치로 옮겨갈 수 있는 점진적이고 유연한 과정의 환경통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남한 정부가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를 공식선언한 것은 성장위주의 개발지상주의에서 환경을 고려한 발전정책으로의 첫 걸음을 천명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sup>33)</sup> 이는 그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지속가능한 발전패러다임을 남한의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나마 남북한 환경통합을 위한 남한의 기본입장을 정리해

30) “여성의 시각으로 본 통일”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모인 6명의 연구자(필자포함)들은 1994년 이후 북한을 이탈해서 남한으로 온 128명의 여성 중에서 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조사는 2000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설문지 작성은 10-15명 내외의 응답자와 공동연구자들이 집단적 대면을 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대일 대응의 심층면접은 아니었으나 자유로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설문지 내용 이상의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었다.

31) 북한에서의 생활경험에 대한 설문에서 “환경보호” 또는 “자연보호”에 대해서는 60.5%가 “자주 들었다”, 30.2%가 “가끔 들었다”, 9.3%가 “전혀 못들었다”고 대답했으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20.9%가 “전혀 못들었다”, 55.8%가 “가끔 들었다”, 23.3%가 “자주 들었다”고 응답하였다. “일상생활속에서 환경오염의 심각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39.5%가 “그렇다”, 58.1%가 “없다”라고 대답하였다(무응답 2.4%). 일상생활에서 일반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것은 환경오염의 진행 정도에 비해 환경의식의 성장은 지체되기 마련인 일반적인 경향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3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1987년 유엔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 의해 발간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통해 널리 알려진 것으로 “미래세대가 그들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출발한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은 최근 들어 국제개발기구와 많은 환경단체들의 주요 전략이 되고 있다.

33)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 92년 리우선언에 따라 각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개발과 환경보전에 관련된 주요 국가정책의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환경협약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세계 60여개 국가가 이 위원회를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자문기구 또는 의사결정기구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9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공식 설치될 위원회는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 장관 등 당면직 위원 12명과 학계 및 언론계를 포함한 민간대표 위촉위원 20명 안팎, 안전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자치단체장 등 지명위원 30명 안팎 등으로 구성되며,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열어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을 사전 조율하게 된다(일간신문 「한겨레」, 2000년 6월 6일자 보도).

준 셈이다. 또한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인 6·15 공동선언문에서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지금까지 남북한 환경관련 협력과 교류가 난항을 거듭해온 사실을 상기할 때 그것이 비록 아직은 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을지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sup>34)</sup>

남북한 환경통합을 위한 교류 및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몇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기본방향은 북한의 정치적 현실을 최대한 고려해서 협력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에 다 함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며, 북한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문제에서부터 출발하고, 남북 화해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환경협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남상민, 1999).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전력 및 대체에너지 부문의 협력 ② 전문인력 교육 및 정보교환 ③ 생태계 조사 및 보호 ④ 산성비 문제 공동대응 ⑤ 해양환경협력 ⑥ 환경기술지원 ⑦ 유엔개발계획(UNDP)의 프로그램 이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남상민, 1999; 손기웅, 1996; 정희성, 1995b).<sup>35)</sup> 여기에 덧붙여 손기웅(1999)은 환경협력방안을 체대로 실행하기 위한 대내적인 조치로 환경기금설치 등을 통한 재원확보, 남북경제교류 협력시 환경보호에 관한 정부의 원칙설명, 민간 전문가간 지속적인 대화유지, 통일에 대비한 환경법과 환경정책의 정비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환경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위와 같은 구체적인 기술적인 협력방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 이전에 남북한이 상호 공통의 삶의 장을 질적으로 개선한다는 서로의 목표를 확인하고, 보다 장기적인 전망 위에서 남북간의 동질성 회복을 겨냥한 생태적 사회발전을 구상해보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더 이상 ‘피해상황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적, 공학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정치체제는 물론 인간의 사회문화적, 도덕적 가치관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폭넓게 파악하고, 통일정책 자체를 처음부터 생태공동체 건설에 부합되게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한이 다 함께 지금까지의 개발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경제력 면에서 우세한 남한의 경우 막대한 환경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기존 개발모델의 오류를 솔직히 인정하고 ‘북한을 남한식으로 개발시키려는’ 사고와 경제력에 기댄 일방적인 시혜자로서의 자세를 버려야 한다. 특히 경제협력을 명분으로 남한의 기업이 북한지역의 환경훼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법적, 윤리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발전방향에 어긋나지 않도록 환경보존계획을 사전에 구상하여 경제협력의 초기 단계부터 함께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북한에도 환경에 피해를 주는 외국인 투자나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법규가 마련되어 있으나, 오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적인 경제협력을 서두르

34) 그동안 남북한 환경협력과 교류를 위한 노력은 정부차원에서보다는 주로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져왔다. 지난 89년부터 환경관련 남북 접촉이 시도되었던 영역으로는 생태학자나 단체에 의한 백두산, 비무장지대 등 생태계 조사 회의(6건), 민간환경단체에 의한 환경회의 개최 회의 및 회의 참가 초청(5건), 국제기구 등을 통한 남북한 전문가 만남(4건)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논의에는 적극성을 보이지만 남북한 단독 논의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북한의 거부나 무반응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제적 연대사업이 아닌 순수 민간차원에서 제안된 10건의 사업 중에서 남북 만남이 성사된 것은 95년 방콕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동북·동남아시아 회의”가 유일한 사례이다. 이에 관해서는 손기웅(1996:30-31), 남상민(1999)을 볼 것.

35) 위에서 언급한 녹색연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제시한 남북정상회담의 환경의제로는 ① 생태조사 및 생태계 복원(41.4%), ② 전력용 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지원계획(10.3%), ③ 환경교류 기반 마련(6.9%), ④ 환경문제 공동대처(6.9%)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북한내의 환경보전 대책, 민간환경협력기구 구성, 포괄적인 환경협약, 한반도 환경위원회 설치 등이 제안되었다.

게 된 북한에서 이러한 환경관련 규제조항이 어느 정도나 실제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생태적 여건을 공유하고 있는 남한에서의 우선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규제가 절실히 요구된다.<sup>36)</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족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통일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기존의 경제 중심에서 사회문화 및 환경 영역으로 남북간 협력의 장을 넓힐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조성과 생태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통일논의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성의 참여 자체가 자동적으로 친여성적인 생태공동체를 향한 여성의 세력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구상 및 시행사업에 남녀평등적 관점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sup>37)</sup> 또한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남북여성들 사이의 이질감과 격차를 해소하고, 상호공동의 이해관심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미 오래 전부터 생활세계에 밀착된 실천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에 몸담아 온 남한여성들의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남북한 여성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생활정치적 주제를 매개로 한 여성 주도의 환경교류는 통일 후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회복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생태공동체를 향한 남북한의 환경통합을 위해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8)</sup> 첫째로 사회적 생산을 담당하는 여성들은 생산과정에 대한 환경감시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남한여성의 48.9%(1999), 북한여성의 93.8%(1993)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기존의 생산과정을 청정생산체제로 변화시키기 위해 여성이 맡아야 할 책임이 크다. 여성들은 국가나 기업에게 친환경적 생산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집단으로서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리고 시장경제체제 하에 살고 있는 남한여성들은 기업의 생산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책임있는 구매행동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친환경적인 생산과 유통을 거친 녹색상품에 대한 선택을 늘려나감으로써 생산체제 자체의 변화를 유도해 내야 한다.

둘째로 재생산 영역에 관여하는 최종 소비자로서 자리매김 되어 있는 여성은 소비되는 상품의 친환경적 관리(물자절약, 재활용, 폐기물 분리 등)는 물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책임이 있다. 특히 남한과 북한의 소비격차는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갈등을 드러나게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남한의 과대소비주의에 대한 올바른 비판이 필요하며, 더불어서 북한으로의 소비오염의 불필요한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필요 이상을 넘어서는 소비는 지속가능성이 충족되는 범주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규범

36) 북한의 외국인투자법(1992) 제11조에는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또한 외국인기업법(1994) 시행규정 제2장 제9조는 “공화국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와 “인민들의 건강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승인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경제무역지대법(1993) 제2장 제13조에도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 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 한계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 효과가 없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통일부 자료실,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37) 남한의 경우 1999년 11월 기준 통일관련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통일고문회의 20%, 통일정책자문회의 8.3%, 통일교육심의위원회 12%에 불과하다(여성특별위원회, 1999:292).

38) 환경보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경제주체(생산자와 소비자)로서, 교육자이자 양육자로서,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전문가와 의사결정자로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는 김양희, 김희선(1993)과 박영숙(1997)을 참조할 것.

을 바꿔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은 미래세대에게 초기사회화 단계부터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그럴 책임이 있다. 인간의 의식과 행동, 삶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는 인간발달 초기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의 장(場)인 가정과 교육자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은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여성들은 가정에서의 경험을 넓혀서 사회의 환경의식 확장에 앞장서고 환경친화적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파급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로 생활정치 담당자로서의 여성은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세계에서 환경문제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보호활동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남한여성들의 지역환경운동의 경험을 돌아볼 때, 여성들은 사회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 사회전체로 시각이 넓어지고, 자신을 국가정책의 대상이 아닌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주체로 자각하게 되며, 자신을 넘어서는 연대성과 공동체적 체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잠재력 개발이 이루어져 환경운동전문가 탄생하기도 하며, 소규모의 일시적 모임이 상설적인 지역운동단체로 발전하기도 한다. 주부들이 가정을 벗어나 조직활동의 경험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는 남한의 현실을 생각할 때, 지역차원에서의 환경활동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북한의 경우, 우선은 조선민주여성동맹과 같은 잘 짜여진 기존 조직을 이용하여 여성을 지역환경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여성은 환경전문인과 환경정책 결정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능력과 자질을 개발해야 한다. 그동안 여성은 개발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는 물론 환경정책의 수립과 결정에 있어서도 소외되어 왔다. 사회적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권한을 지니지 못했다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여성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취약점으로, 양 체제 여성들의 전반적인 과소대표성을 반영하고 있다. 여성이 환경전문인과 환경정책 결정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그에 걸맞는 권한을 지니는 것은 재생산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환경활동의 소극성을 뛰어 넘어 제도정치와 국가전략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변화를 위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여섯째로 사회발전의 주체로서의 여성은 한반도를 생태공동체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환경위기의 극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여성 및 환경관련 국제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은 지구환경개선이라는 과업에 여성들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지침인 여성행동계획을 세우고 그 이행결과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새로운 전략과 대안을 모색해왔다. 남북한 여성들은 우선 양자간 교류를 통하여 상호관심사를 확인한 뒤, 이러한 국제적 논의와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남북한 공동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은 물론, 세계 환경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연대사업을 할 수 있는 여성전문인력을 발굴, 양성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북한여성들을 국제적 협력이 전제가 된 여성환경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여성의 중요성을 일깨움은 물론, 체제로부터 자유로운 여성운동의 물꼬를 트는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6. 맺음말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인간에 대한 차별과 자연에 대한 수탈이 야기한 지구 환경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20세기 문명이 인류에게 남긴 가장 커다란 숙제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더 나은 대안적 문명을 구상하는 일은 통일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 여성들이 바라는 통일한국의 미래는 양성평등적이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사회이다. 그리고 그곳은 반세기 동안의 분단이 낳은 차이와 대립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싸안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통일로 가는 길이 평화와 공생, 연대와 책임, 참여와 평등이 토대가 된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남북의 여성들이 다 함께 노력해야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진행된 남북간 통일논의에서 '여성'과 '환경'이라는 주제는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각 체제의 내부에서 친자연적인 사회발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세력화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통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들 스스로가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해야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직 발휘되지 않은 여성의 잠재력과 능력을 개발하여 통일 대비 역량을 키워나가고, 그를 토대로 통일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능동적,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사회발전에 대한 여성들의 주체적인 개입은 여성들이 통일정책의 단순한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서 통일의 방향에 새로운 차원을 제시해 줄 것이다. 특히 생태여성주의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성환경의제들을 남북한 여성들이 공동으로 실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친자연적인 사회의 전망 속에서 자율적이고 평등한 생활세계를 살려나가는 것은 현세대의 여성들이 후세대에게 남겨 줄 수 있는 가장 의미있는 유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강령, 1995. "북한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북한연구》, 제6권 제2호.
- 김귀옥 외, 1997.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대동.
- 김상중, 1994. "남북한 통일과 환경정책", 《환경과 생명》, 봄호.
- 김양희, 김이선, 1993. 『환경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탁, 1997.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한울.
- 김정민, 1995. "북한의 후진형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의식", 《북한》, 2월호
- 김타균, 2000. "한국환경변화에 관한 보고서", 녹색연합, 제30주년 지구의날 기념 보고서.
- 김현미, 1998. "아시아 여성학 형성을 위한 연대 모색",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정정현》, 27호.
- 남상민, 1999. "남북 환경협력을 위한 민간부문의 진행과정과 향후 의제", 녹색연합 정책토론자료
- 문순홍, 1994. "서구녹색정치와 역사와 환경정책의 제도화", 《환경과 생명》, 봄호.
- 박영숙, 1997. "환경자치시대와 여성의 역할", 97년 세계 환경의 날 기념 심포지움 기초발제문.

- 박장현 편저, 1999. 『독일통일, 한국의 모델인가?』, 문원출판.
- 박종권, 1998. 『북한의 환경실태와 통일을 대비한 환경정책의 방향』,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봉숙, 1995. 『북한의 여성; 그 삶의 현장』, 공보처.
- 안병옥, 1995. “한반도의 통일과 환경을 생각한다”, 《환경운동》, 2월호.
- 여성특별위원회, 1999. 『여성백서』.
- 윤기관, 1994. “북한 환경정책의 현황과 전망”, 《환경과 사회》, 겨울호.
- 이득연, 1998. 『환경운동의 사회학』, 민영사.
- 이마무라 히토시, 1999. 『근대성의 구조』, 민음사.
- 이상문, 1994. “엔트로피 논의와 환경문제”, 환경연구회 편저, 『환경논의의 쟁점들』, 나라사랑.
- 이은숙, 1988. 『북한사회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진아, 1995. “여성,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창작과 비평》, 통권 90호.
- 손기웅, 1996.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민족통일연구원.
- \_\_\_\_\_, 1999. “환경분야 남북한 교류, 협력의 의미와 방안”, 녹색연합 정책토론자료.
- 정수복, 1996. 『녹색 대안을 찾는 생태학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 정유진, 1992. “북녘땅 쓰레기 유감”, 《북한》, 12월호.
- 정준금 외, 1999. 『환경과 사회』, 대영문화사.
- 정희성, 1995a. “북한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북한》 12월호.
- \_\_\_\_\_, 1995b. 『북한의 환경문제와 남북환경협력 추진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_\_\_\_\_, 1995c. “통일 한국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김수곤외, 『통일 이후의 사회와 생활』, 미래인력연구센터.
- 정희성, 강철구, 1999. “북한환경 연구”,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 한울.
- 조한혜정, 1998. “아시아 지역의 페미니스트, 왜, 그리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 《당대비평》, 통권 5호.
- 조효제, 2000. “시민사회의 변화와 주권의 급진적 재편”, 《창작과 비평》 통권 107호.
- 최종욱 외, 1994. 『현대의 위기와 새로운 사회운동』, 도서출판 문원.
- 통일부, 2000. 『북한개요 2000』.
- 환경부, 1999. 『환경통계연감』.
- Braidotti, R. et al., 1994. *Women, the Enviro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London:Zed Books,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한국여성NGO위원회 여성과 환경분과 옮김, 나라사랑.
- Hillenbrand, O., 1996. “Umwelt”, in: Weidenfeld, W. & Korte, K.-R. (Hrs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Rastrup, R. & Weymar, T., 1982. “Schuld ist allein der Kapitalismus”, *Deutschland Archiv*, Köln.
- Strübel, M., 1991. “Auf dem Weg zur Umweltunion”, in: Liebert, U. & Merkel W. (Hrsg.), *Die Politik zur deutschen Einheit*. Opladen:Leske+Budrich.